

대구·수원공항은 이전지 확정, 광주는 대상지 반대에 답보

250만평 미래도시 부지 탄생 ... 성공 땀 광주권 발전 잠재력 급상승

2013년 '군공항이전 특별법' 통과 후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승인을 받았다. 그 후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전라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광주 군공항이전 후보지인 무안에서는 군공항이전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무안의 군 공항 후보지 거론 지역은 무안군의 관광, 산업, 지리적 중심지이고 무안군의 핵심 지역이며, 광주민항 통합을 발미로 군사공항을 옮기려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최근 성명을 통해 무안군을 직접 거명하고, 전남지역 지자체의 반대를 지역이거주의로 치부했다고 밝히며 갈등과 분열 조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에 앞서 전남의 무안·영암·신안·해남 4개 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지난 3월 국방부의 이전예비 후보지 주민설명회 또한 무산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전라도와 광주시, 국방부는 서로 다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가 직접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소통을 통해 국방부, 전남도와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제공되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만 내놓고 있다. 현재 타협할 수 있는 길조차 막혀버린 것이다.

대구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수원 또한 예비 이전지 선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광주는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있어서 광주시와 전라도의 협력은 절실하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해당되는 두 지역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군공항을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광주시 발전에 힘쓰고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상권 발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편입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연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 및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사업 발굴'이다.

그러하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소음 피해 예상지역을 소음완충지역으로 추가 매입하고 이주대책 지원을 하는 손실보상 사업, 사회기반 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지원하는 편익시

설치사업, 영농시설 확충 및 현대화,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교육과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이전부지가 결정되기 이전 지역 주민이 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 곳곳에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낱알이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무안군 군공항 이전대책 협의회의 반대서명에 무안 주민 8만여명 중 절반인 4만여명이 서명했다.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가장 큰 반대이유다.

새로 건설하는 군 공항은 소음 해소를 위해 광주 군공항보다 소음완충지역을 약 1.9배 크게 건설하여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주민 설명회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후보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광주시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있어서 상생 발전에 의의를 두고 진행하는 만큼 해당 지역과 소통과 협력정신이 중요하다. 서로 장단점만 해당처럼 내놓는 것은 문제를



원도산마을 동남쪽 끝에서 본 광주 제1전투 비행단 부대 모습. 활주로 까지 200m도 안된다.

결할 수 없다.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절충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도 여전히 광주 군공항의 훈련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투기 소리가 수십번 하늘을 가로지른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상징하는 중요 사업이다. 해답은 결코 한쪽에서만 얻을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인내심도 바닥나간다. /송은지 학생기자

“일방추진 금물, 이전 지역민 도움되는 혜택 홍보 노력”

인터뷰 **곽 현 미**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군 공항 이전사업 향후 전망

-원도산마을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 설치당시인 1965년 대부분 농지를 국방부에 수용당한 주민들입니다. 그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는 세대가 많습니니다. 이들은 군 공항이 드디어 이전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군공항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국가사업이며, 전국적으로는 현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원시에서 이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 비행장이 건설되어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한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전투기 소음에 따른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 많은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는데, 이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방부는 지난 5월 광주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지역인 무안 영암 신안 해남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주군공항이

전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에서는 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결사반대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군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적정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공항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 성공을 위해서는 전남 해당지역의 양보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남 도청의 역할은 없는가요?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종전부지 지자체(광주시)가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종전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기존공항)의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설사업'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이전 건의서상 지원사업비는 4천500억 원으로, 사업 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단지, 스포트 팜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관련 시설은 이전지역 지자체에 양여할 예정입니다.

군 공항 이전시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의, 공청회,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전남도청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군 공항이 이전한다면 현재 공항 부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의 공항부지는 KTX역, 지하철, 제2순환도로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영산강·향로강에 둘러싸여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여건의 현 공항부지를 활용하여 광주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확보를 통해 광주와 호남권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현 공항부지에 스마트시티 및 국제적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하여 현 공항부지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송은지 학생기자

5조 7000억 투입, 2028년 완료 목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란

원도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바로 공군비행장 소음문제다. 공군비행장과 바로 맞닿은 원도산마을 주민들은 광주시의 도심팽창으로 서구일부와 광산구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기 수십년 전부터 고통을 겪어왔다.

이곳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낭보가 전해진 것과 비슷한 시기,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조건없이 무안공항에 이전시키고 나아가 공군비행장을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고 끝에 2013년 김진표·유승민·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어 국방부에서는 현재 광주와 대구, 수원이 군공항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를 결정중인 대구를 제외한 광주와 수원 지역의 사업에는 차질이 생겼다. 특히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광주군공항은 1964년부터 한반도 영공을 지키는 16개의 전술 항공작전기지 중에 하나이다. 1986년 행정구역개편으로 광주광역시로 전라남도에서 독립되며 도심 외곽의 허허벌판에 광주군공항이 지어졌다.

광주군공항은 1964년부터 한반도 영

공을 지키는 16개의 전술 항공작전기지 중에 하나이다. 1986년 행정구역개편으로 광주광역시로 전라남도에서 독립되며 도심 외곽의 허허벌판에 광주군공항이 지어졌다.

그 후 광주 발전을 따라 도심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군공항 주변지역이 도심지역으로 변모했다. 그렇게 군공항 근처로 많은 주거지역과 상권이 형성되면서 그만큼 주변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그에따라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군공항의 훈련소음이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문제로 떠올랐다. 밤낮으로 이뤄지는 훈련에 주민들이 소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배상금지금을 해왔다. 그렇게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재정부담과 주변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이러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광주 군공항은 특별법 통과이후 이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은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예상 소요사업비는 총 5조 7,480억원으로 추산된다. 463만평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과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협의를 추진하는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248만평에 이르는 종전부지를

발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서남권의 중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은 지난해 8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통합했다. 광주-무안 국제공항 통합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이 용접근성을 향상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우노선 조기 완공 및 주변역세권 개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러한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이 있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 절차는 이렇다. 국방부를 통해 군 공항 이전 건의성 타당성 승인 후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등의 선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전후보지 최종선정 후 국방부와 함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며 유치 신청을 완료하고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이전 사업이 시행된다.



언론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예비언론인을 길러냅니다.